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이 인 호**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를 분석, 이들이 역내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아베 2기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고노담화’ 검증,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의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는 결국 동북아에서는 미중간에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미일동맹에 대응한 중러 간의 협력 강화와 중일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한일관계의 악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체제에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주변국간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일방을 택하면서 다른 일방과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의 공통

* 이 논문은 2014년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ihlee94@hanmail.net

분모를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리외교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해서 유기적인 한미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아베정부, 우경화, 미일동맹, 집단적 자위권, 야스쿠니신사, 미일 방위협력지침, 고노담화

I. 문제의 제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인 4월 28일을 맞춰 2015년 4월 28일 미국을 방문,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으며, 이에 미 상원은 ‘미일동맹 중요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미일동맹관계는 지역동맹에서 전후 어느 때보다 긴밀한 글로벌 동맹관계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2012년 말 출범하면서부터 침략을 부정하는 역사 퇴행적인 발언을 거듭 하고, 집단적 자위권 인정, 고노담화 수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아베내각의 우경화 정책은 집권 3년이 거의 경과한 현재에도 그 강도를 더해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집권 1년이 경과한 2013년 12월에는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공분을 쌓았다. 그 이후 아베 내각의 총리를 포함한 다수의 각료 및 정부 관련인사들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의 날 행사 강행,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장 등 우경화 정책으로 한국과 중국의 정부 및 국민들의 감정을 연일 자극해

오고 있다.¹⁾

한편 미국은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군비확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에 편승해서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미일 동맹관계는 집단적 자위권, MD체제 등 군사는 물론, TPP 등 경제·세일협력 등 에너지 분야로까지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역사인식 문제와 안보 문제를 구분하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일본의 아베정부가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아태정책의 기축으로 다방면에서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심화하는 미일 신밀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역내 외교·안보질서가 상당히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에게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한일관계 경색국면과 동북안 안보환경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현명한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 동향과 이에 따른 미일동맹 강화를 분석하고, 이런 상황들이 역내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후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아베 정부의 우경화 배경과 목표

1) 『아산정책연구원』이 2014년 7월 발표한 “국가수장 호감도”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민들의 아베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1.16점(10점 만점)으로 북한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1.18)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아산정책연구원 2014).

1.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

2012년 12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로 자민당의 아베 총재가 총리에 오르면서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다. 제2차 아베 내각은, 2013년 7월의 참의원 선거 그리고, 이어진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하면서 안정적인 정권을 구축, 오랜 경기 침체와 동일본 대지진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일본 사회에 강한 일본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인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²⁾

(1)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총리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권출범 1주년을 맞은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숨진 246만 6,000여 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신사인데, 1978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되면서 총리나 각료의 공식참배 여부가 주목받아 왔다. 일본 총리가 재임 중 공식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은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가 처음이다(박진우 2013, 84-89). 이후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신조 등 3명이다. 아베의 이번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는 일본의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한 2006년 당시

2) 2012년 12월 16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중의원 480석의 과반수를 넘는 294석을 확보하였으며, 연립상대인 공명당의 31석을 합하면 헌법 개정 발의 및 재의결이 가능한 2/3 의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었으며, 7월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하여 총 242석 중 과반이 넘는 135석(자민당 115석, 공명당 20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2014년 1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상회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고이즈미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아베 총리가 군국주의의 본산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은 그의 왜곡된 역사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2012년 총리 선거전부터 1차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당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통한’이라고 말했다(김용수 2013). 아베는 2012년 2차 내각 출범이후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 우익세력을 배려하는 우익 퍼포먼스와 대외관계를 증시하는 현실주의 노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는데,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까지 압승하자 안정적인 정권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보인다(조양현 2014, 6).

<표 1>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국회의원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춘계예대제(4월)	59	57	83	168	147
중전기념일(8.15)	41	53	55	102	-
추계예대제(10월)	66	68	68	157	-
계	166	178	206	427	-

출처 : 최재천 의원실(2014).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중·참의원 및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의원이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아베 정권 출범 이전에 비해 이후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의원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베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의원이 206명에 불과 했으나, 출범 이후인 2013년에는 427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현직 총리 및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빈번해지고 있다. 2012년에는 현직 각료의 신사 참배한 횟

수가 4회(3명)에 불과했으나, 아베 정권 출범이후 2014년 상반기까지 아베를 비롯한 현직 총리 및 각료들이 10회(5명)에 걸쳐 참배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재천 의원실 2014).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로 한·중·일 간 역사논쟁이 가속화하고 미국이 실망하고 있으나³⁾, 보수층의 지지를 업고 있는 아베는 이런 것들이 일본의 대외관계에 심각한 타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한 것은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취해온 이전의 모든 노력들을 무효로 만들어버릴”(Klingner 2014)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2) 고노 담화 검증 :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시도

아베 정부는 2014년 6월 20일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으며, 양국 정부가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김용수 2014b). 이는 당초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반발로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담화가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외교협상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베는 2012년 말 아베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자민당이 집권할 경우 소위 ‘3대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3대 담화란 과거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담화인데, 미야자와(宮澤)담화, 고노(河野) 담화, 무라야마(村山) 담화가 그

3)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 12월 26일 기습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주일미국대사관은 즉각 ‘실망했다(disappointed)’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Chanlett-Avery 2014, 6-7).

것이다. 미야자와 담화(1982년)는 이웃 국가를 배려한 교과서 기술, 고노 담화(1993년)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죄, 무라야마 담화(1995년)는 식민지배·침략을 사죄한 내용이다.⁴⁾ 고노 담화 검증결과 보고서 발표는 3대 담화 수정을 위한 출발점인 것이다. 고노 담화 흔들기를 통해 아베 정부가 노리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배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보수 우익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자의적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근거로 고노 담화를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이세원 2014), 우익 인사인 이나다 도모미(稲田明美)는 행정개혁상에서 정무조사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바로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극인 2014). 그러나 미국 및 주변국들의 반발 때문에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베 총리는 2014년 3월 국회답변을 통해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2015년 4월 방미 중 기자의 질문에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변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위한 헌법 재해석

아베 정부는 2014년 5월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공식화하고, 7월 1일 각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헌법을 재해석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별적 자위권은 어떤 국가가 적국의 무력공격을 받

4) 구체적으로 미야자와 담화는 1982년 8월 26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일본 교과서 기술시 한국, 중국 등 이웃 국가를 배려한다는 것이고,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설치 및 위안부 강제징집을 인정하고 사죄한 담화이며,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태평양 종전 50주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고 총체적인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담화이다.

았을 때 개별적으로 자신을 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우방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은 유엔 회원국이기에 때문에 논리적으로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토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2006년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하면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를 구성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변경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제1차 아베 정권이 단명으로 막을 내리면서 아베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승하면서 복귀한 아베 총리는 동일한 명칭과 구성원을 가진 자문회의를 2013년 2월 재발족 시켰다. 이 간담회는 1년여 연구 끝에 2014년 5월 15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아베는 당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했다(김용수 2014a).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추구하려는 전략적 목표는 대중국 억제력 증강, 중국과의 도서 분쟁에서 미국의 군사개입 확보,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계기 설정, 국내 보수 세력의 지지 확보를 통한 안정된 정권 유지, 자위대의 실질적 전략 증강, 그리고 군수산업의 해외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확보 등이다(정철호 2014, 15-16).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위한 헌법 재해석을 위한 각의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 2015년 4월 27일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다. 그리고 6월 16일 관련법안인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PKO협력법」, 「주변사태법」 등 11개 법안의 개정을 일

관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국제평화지원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참의원 통과도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이변이 없는 한 회기 내(9월 27일까지) 통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베는 1차 집권 당시(2006-2007) 이루지 못한 과제였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2013년 말 강행했고, 이어 고노 담화를 검증했으며, 이제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위한 헌법을 재해석하고,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우경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아베는 최종목표인 헌법 개정을 위한 단계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교과서 제도 개혁을 통한 우경적 역사 인식 확산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가 야스쿠니신사 참배, 고노 담화 검증,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과서에까지 개입하면서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극우적 성향의 역사 인식을 역사교과서를 통해 확산시키기 위해 교과서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06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國へ)에서 지난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해 온 일본의 교육 탓에 아이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이런 ‘자학사관’을 버리고 일본인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아베는 제1차 내각 당시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재생회의’를 설치하고, 2006년 59년 만에 『교육기본법』(1947년 제정)을 개정하고, 2007년에는 ‘교육3법’을 개정했다.⁵⁾

5) ‘교육3법’이란 「학교교육법」, 「교육직원면허법·교육공무원특례법」, 「지방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권오현 2014, 37)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총리로 취임한 이후 ‘교육재생회의’를 부활시킨 ‘교육재생실행본부’를 설치해서 교과서 제도개혁을 진행 중이다. ‘교육재생실행본부’의 교과서검정 특별위원회가 2013년 6월 25일 아베 총리에게 현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인식을 ‘자학적 역사관’이라고 비판하며 재고가 필요하다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중간보고서의 현 상황 인식 부분에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지만 현행 교과서에는 여전히 많은 자학적 역사관 등 문제가 되는 기술이 있다”며 “정부 견해나 확정된 판례가 있는 것은 그대로 기술하도록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김지영 2013). 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정부의 견해를 주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후 아베 정부는 ‘교육재생실행본부’의 중간보고서가 제시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아베 정부는 2014년 1월 17일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해 교과서에 영토나 역사문제를 다룰 땐 반드시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따르도록 의무화 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차 내각 당시 1947년 제정된 「일본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며 애국심을 강조한 바 있고, 2012년 재집권하면서 ‘자학사관 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초·중학교 사회, 고교 지리역사·공민 교과서의 검정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시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기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개정된 기준에는 ①미확정 시사적 사안에 대해 기술할 경우 특정 사항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을 것, ②근·현대사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을 경우 그것을 명시하고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 것, ③정부의 통일적인 견해 및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근거해 기술할 것 등을 새로 추가했다(교도통신 2014/01/17). 개정된 검정기준은 2014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 교과서는 앞으로 독도·센카쿠 문제를 다룰 땐 정부 견해에 따라 ‘독

도·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 식으로 기술해야 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종결됐다”는 식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2013년 11월 ‘교과서 개혁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28일 교과서의 집필기준인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쓰이는 중학교 지리·역사 교과서, 2017년부터 쓰이는 고등학교의 일본사·지리 교과서 등에는 모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되게 됐다. 이번 해설서 개정은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의 배경

아베 정부가 우경화를 행보를 가속화하는 배경으로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적 배경으로는 첫째, 일본의 보수적인 자민당이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강한 외교를 외치는 보수적 성향의 신인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것이 어느 때보다 우경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자민당은 2012년 12월 총선에서 압승하였으며,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하여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베 내각에 참여한 정치인들도 대부분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인물들이었다(김용복 2013, 41; 고선규 2014, 317-24). 둘째는 일본사회의 보수화를 들 수 있다. 일본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유권자 층의 보수화를 가져온 기반이 되고 있으며, 과거 역사에 대해 부채의식이 없는 전후 세대가 사회 중추를 형성하면서 보수정치인·우익세력과 연계하고 있는 경향이라는 것이다(김용복 2013, 40; 박

영준 2014).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좌절감, 중국에 GDP 규모 역전에 대한 불안감, 소니 파나소닉 등 간판 전자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삼성·LG에 줄줄이 패하는 가운데 한국과의 경제력 격차 축소,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에 대한 일본인의 불안에 대한 반동이 결과적으로 일본사회를 전반적으로 우경화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아베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들 수 있다. 아베는 탈냉전 후 민족주의와 일본의 전통, 가족, 국가재건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 그리고 신국가주의라는 이념을 가진 강경한 보수우익을 상징하는 정치인이다. 아베는 외조부가 A급 전범용의자이었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이고, 조부는 중의원 의원을 지낸 아베 히로시(安倍寛)이며, 부친은 외상을 지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로 정계의 명문 출신으로 정·재계에 폭넓은 보수 인맥을 가지고 있다. 아베는 2006년 1차 집권했을 때에도 여러 우경화되고 민족주의적 발언과 정책으로 인기를 얻었다. 아베는 2012년 12월 총선거에서 고노담화의 수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국방군으로 승격,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 개헌발의 요건 의원 과반수로 변경, 자학사관 편향 교육 중단 등을 공약(서의동 2012; 이면우 2014, 24; 배정호 외 2013, 86)으로 내걸고 압승했기 때문에 아베의 우경화 행보는 이미 예견되었다.

대외적 배경으로는 첫째, 무엇보다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불황 속에 중국의 부상으로 ‘역내 제1국가’ 지위의 박탈로 중일 간 위상 역전으로 위기감을 느낀 일본국민들로 하여금 강한 일본을 동경하게 만들었다(김용복 2013, 41). 일본은 2010년에 센카쿠열도 어선충돌 사건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는데 이어 GDP까지 중국에게 밀려 2위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으며,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충격을 겪었으며, 54개 원전은 가동이 중단 되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지지도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 부터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의 종결에 따라 아시아 지역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수 년 동안의 경제 위기로 인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정면 대결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연계해 이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Bowie 2014). 아베 역시 최근 G2국으로 부상해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간파, 미국에 편승해 일본 재무장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와중에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분쟁도서인 센카쿠열도와 이어도 지역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언하자 일본과 미국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특히 미국의 척 헤이글(Chuck Hagel) 국방장관은 “센카쿠는 미·일 상호방위조약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조 바이든(Joe Biden) 부통령도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일 동맹관계의 긴밀함을 과시했다(Xu 2014). 따라서 오바마의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아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명했으나, 일본의 센카쿠 영토분쟁에 일본 지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위한 헌법 재해석 지지, 그리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아베정부의 우경화정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3. 아베의 우경화 정책의 최종 목표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이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 아베 총리는 패전 후 미국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체제를 수정하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명문화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 정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른바 자학사관을 극복하고, 경기부양책의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미일동맹 강화로 주변국가의 반발을 누르고, 여론이 뒷받침되면 개헌을 추진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번에 추진한 ‘해석 개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번 헌법 해석 변경은 ‘보통국가’와 ‘군사대국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에게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의 최종 목표는 헌법을 정식으로 바꾸는 ‘개헌’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교수는 “우경화를 추진 중인 아베정권의 최종목표는 헌법 개정, 적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받기 위한 것”(호사카 2014)이라고 했다. 아베 정부는 다음 수순으로 곧바로 후속 절차에 나서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이미 2015년 9월 참의원 통과를 목표로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PKO 협력법」 등 11개의 안보관련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행보는 관련법 개정엔 그치지 않고 개헌까지 넘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제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1946년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하지만 보수 우익세력은 패전 이후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아베 총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헌법은 점령군의 손에서 만들어졌다고 개헌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1993년 정치에 입

문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헌법 개정이 나의 정치목표’라고 공언해왔고, 2006년 1차 집권했을 때도 개헌을 밀어붙이다 1년 만에 퇴진했다. 그리고 2012년 재집권 이후부터 ‘개헌은 나의 사명’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왔다(콘도 2014). 아베 총리는 2014년 3월 국회 답변에서 “(현행) 헌법 자체가 점령군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는 전후체제를 탈피해서 현재의 세계정세에 맞도록 일본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등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김용수 2014c). 아베 총리는 2014년 10월 18일 ‘라디오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도 “현행 헌법은 점령군의 영향 아래에서 원안이 작성됐다. 역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평화헌법 개정 방침을 거듭 밝혔다(조준형 2014).

특히 A급 전범용의자이면서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총리가 헌법 개정을 생전의 과업으로 남겨냈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에게 개헌은 유훈에 가깝다. 결국 아베 총리의 우경화의 최종 목표는 평화헌법 개헌을 통해 전후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계에서는 아베 총리가 2014년 1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2015년 9월 자민당 총재에 재선출 되고,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일본 헌법이 시행된 지 70주년이 되는 2017년에 개헌 발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Ⅲ. 미일동맹 강화 동향

2012년 말 총선에서 압승, 재집권한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얻은 높은 지지율을 방패삼아, 국내적으로 우경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미일동맹 강화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 22일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3년간 일본 민주당 집권 당시 다소 소원했던 것으로 평가된 미일동맹의 부활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의 강화는 일본외교의 기축이며, 강한 일본은 미국에게 이익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의 중심적 토대”라고 화답했다(이동구 2013; 이우탁·이충원 2013).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방위대강 개정, 후텐마 기지 반환계획의 조기진행, TPP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미·일 양국은 2015년 4월 27일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일 방위협정지침’을 개정하고, TPP와 관련 합의, ‘미일공동비전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관계를 신밀월⁶⁾ 관계의 개막으로 지칭될 정도로 질적으로 강화했다.

1.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아베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

6) 여기서 미일관계를 신밀월관계로 지칭하게된 것은 과거 1980년대 ‘레이건-나카소네’, 2000년대 ‘부시-고이즈미’ 시대에 이은 또다른 밀월관계라는 의미를 내포함.

에 편승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 결국 2014년 7월 1일 각의를 거쳐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을 바꿨다. 이제 일본은 자위 조치를 이유로 헌법이 금지해 온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정권의 판단에 따라 타국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일본 내에서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의 대상과 헌법 해석이 변화되어 왔다. 1946년 제정된 헌법 9조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이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 성립된 것은 1960년 체결된 신안보조약의 심의 과정에서였다. 당시 법제국 장관이던 하야시 슈조(林修三)는 집단적 자위권이 UN헌장에 인정되고 있으나, 일본 헌법 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본 스스로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했다. 이러한 입장은 1997년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지된다. 일본은 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신가이드라인에는 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에 대하여 일본의 영역 밖에서 병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할 여지를 제공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해 일본의 주변 지역까지는 사실상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후 2001년 10월 일본은 9.11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미군의 테러전 지원 병참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김준섭 2013, 14; 김준섭 2008, 328-29).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의결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한국과 중국은 강하게 비난하거나 우려하는 입장인

데 반해, 미국, 호주, 러시아 등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4월 방일시에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 지지했으며, 일본 각의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하자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7월 1일 성명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는 지속적 노력에도 힘을 보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노효동 2014).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 여파로 군방예산을 자동 삭감하는 형편에 일본의 든든한 경제력과 역할 확대는 현실적으로 미국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 군사·경제·외교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에 미국을 대신해 힘써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결과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미국의 환영으로 나타나고 있다(Chanlett-Avery et al. 2014, 2-3). 결과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해 온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로써 미일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2.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아베 정부의 또 다른 미일동맹 강화정책 중의 하나는 『미일 방위

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 각의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하자, 바로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2014년 말까지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결국 2015년 4월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일 양국은 양국 군사협력의 범위를 일본 주변 지역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로 1978년에 처음 책정된 후, 1997년에 한차례 개정되었고, 이번에 18년 만에 재개정된 것이다.

1978년에 책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소 냉전체제 하에서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자위대 활동영역은 ‘일본 유사시 자국방위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 대신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 한반도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미일 양국은 상호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지침을 1997년에 개정했다. 1997년에 개정된 신 가이드라인은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를 ‘일본의 유사사태’에서 ‘일본 주변의 유사사태’로 확대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군 후방지원을 명목으로 활동영역을 일본 바깥으로 무제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Xu 2014). 그런데 2013년 미일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대두와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한 일본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안보 동맹의 확대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 안정 및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다는 미일동맹의 전략적 구상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미·일 안보방위협력의 확대, 주일미군 재편의 가속화와 전력 증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

였다(김두승·송화섭 2013; Klingner 2013).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정부는 2014년 10월 8일 도쿄에서 외교·국방 당국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위협력소위원회를 열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방향성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확정된 후, 2015년 4월 27일 미일안전보장위원회에서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에 재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일협력의 범위를 일본 주변지역에서 아태 및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안보협력 상황 확대, 상설 ‘동맹조정 메커니즘’(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 설치, 평시의 안보협력 범주

〈표 2〉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변천사

연도	1978	1997	2015
상태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이유	미일 방위협력 구조와 역할 규정	냉전 해체 뒤 안보환경 변화, 북한 핵 위협	미국 영향력 축소에 따른 일본 역할 확대, 중국의 팽창
주된 위협	소련	북한	북한, 중국
미일 방위 협력 가동	①일본에 무력공격 ②극동 유사사태	①평상시 ②일본에 무력공격 ③일본 주변 유사사태	①평상시 ②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상황 ③일본이 군사적 외침을 받는 상황 ④미국과 다른 나라가 군사적 외침을 받는 상황 ⑤일본내 대규모 재해발생 상황
자위대 활동범위	주로 ‘일본 유사사태’에 한정	‘일본 주변의 유사사태’로 확대해 한반도 포함	지역 구분 없이 전 세계로 확대
주변국과의 협조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지역의 다른 동맹국(한국 등)과 정보수집, 후방 지원의 내용에 대해 다국간 안전보장과 방위 협력을 추진

출처 : 박형준(2014; 2015)을 참조하여 정리.

확대 등이다(유응조 2015, 2).

이와 같이 강도 높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미일 양국이 합의한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협력관계가 그만큼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주는 함의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근거를 제공하고, 중국과의 대결 가능성을 상정한 ‘공동 대응을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지침 개정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짝을 이루면서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게다가 재정난으로 국방비 삭감 압력을 받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지침 개정이 헌법을 개정,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재창설하여 주변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미사일 방어체제의 강화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더불어 미일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집단적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 사례 중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지스함이 일본 주변에서 경계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방어하고, 북한이 실제로 괌이나 하와이 등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대한 공동 기술연구에 참여할 것을 그해 12월 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후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시기 안전보장회의와 각의의 결정을 통하여 미국의 PAC-3, SM-3 요격미사일을 획득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으며, 200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PAC-3를 실천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은 미사일의 추적 및 감시, 그리고 조기경보를 위한 위성 및 레이더의 개발에도 집중하는 동시에 미국의 X-band 레이더인 AN/TPY-2를 배치했다(박휘락 2013, 92-94).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베 정부도 미국과 일본은 일본 주변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014년 4월 6일 아시아 순방 중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2017년까지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배치해 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일본에 배치되는 미국 이지스함은 기존의 5척에서 7척으로 늘게 되었으며, 일본 자체가 보유한 6척의 이지스함과 더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일본의 본토 방위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영권 2014). 현재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방어 체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나(Rinehart et al. 2013) 한국정부는 중국의 자극을 우려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IV.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1.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최근 동북아 정세는 역내 국가 간 상호 협력과 갈등이 혼재하는 가운데 각국은 국익과 실리에 따라 합종연횡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정세의 흐름의 중심에 있는 국가는 물론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라는 재균형 정책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며, 중국은 경제적 부상을 기반으로 ‘신형대국관계’를 주창하며 동북아에서 G2국가로의 자신의 위상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자민당의 아베 정부가 집권하면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우경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3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는 동북아 역내 관련 국가들을 자극하고 상호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고노 담화 검증 및 위안부 부정 등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 수정주의는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을 자극,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및 안보법제 정비 등 보통국가화 행보를 위한 미일동맹 강화는 미중 간 경쟁을 유발하고, 중국을 자극하여 군사력을 증강케 하고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채택한 미국은 일본과의 밀착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고삐를 바짝 죄고 있고, 이에 맞서 신형대국관계를 내

세운 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일동맹이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도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화통신은 “새 방위협력지침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홍제성·이준삼 2015).

중국은 미일동맹 강화에 맞서 러시아와 다양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미일동맹에 대응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5월 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치·경제·군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적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HeraldK 2015). 중러관계는 이미 2012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밀월 관계가 강화되어 왔다. 특히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러관계는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중러간의 전략적 밀착은 2014년 5월 상하이 정상회담에서부터 명확하게 확인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와 전략적 협력의 신단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타국에 대한 간섭과 일방적인 자세”에 반대한다고 천명하면서 미국에 대한 대항 자세를 분명히 드러냈으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시키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미국의 국제문제에 대한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 미일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경제적 실리 도

모 등이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급속한 밀착은 안보분야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에 대응해 확대·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는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일동맹과 중러 연합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중러 협력체제와 미일 동맹체제와의 대립과 갈등은 동북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동북아에서 미일 대 중러의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중관계의 특징은 상당히 복합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며 미국으로부터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위를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이 강조하는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 패권을 겨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영토·주권 등 중국의 ‘핵심 이익’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중국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중 양국은 사안에 따라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영향력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사안에 따라 경쟁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기간 경쟁하면서도 미국 우위의 세력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 되었고, 2010년에는 GDP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에 미국은 대아프간·이라크 전쟁을 종결시키면서 재균형 정책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우위를 유지하고자 역내 군사력 증강과 함께 동맹국 특히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일동맹 강화는 아베정부의 보통국가화 전략과 맞물려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상당기간 동안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간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경쟁이 심화·존속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중 관계는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략적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취임한 이후의 중일관계는 1972년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일관계의 악화의 원인에 대해 리웨이(李薇)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은 양국 간 정상화 이후 누적돼온 복합적인 문제들이 아베 총리 재임 기간에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신민재 2014). 대체로 시진핑·아베 정권 하의 중일 관계의 악화에 대해서는 세력전이, 일본의 우경화와 중국 지도부의 권력투쟁, 민족주의, 일본의 동맹중시와 중국 측의 포위망 돌파 시도라는 지전략적 게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서승원 2014, 154-156).

양국에서 새 정권이 등장한 직후인 2013년 상반기에는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문제와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적 언행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적 공방을 벌렸다. 양국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서로 강경대응을 천명하면서 상호 경찰업무를 강화하였으며, 이는 결국 역사주권 문제로 확대되었다. 2013년 상반기 아베 정권이 침략전쟁,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과거 정부의 방침을 수정 혹은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시진핑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2013년 하반기인 11월에는 시진핑 정부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12월 아베 수상이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전격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된다(서승원 2014, 154-163).

일본이 미국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중·일간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가 미일동맹의 대상지역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일 과거사와 영유권문제를 가지고 긴장의 고삐를 조이면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관계개선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2014년 4월 미일정상회담에서 “센카쿠열도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범위에 있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자,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주중 대사를 불러 엄중한 항의를 전달하고,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시기의 산물로서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다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에 속해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성철 2014; 조준형 2014). 중국은 미일동맹 강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중국의 안보와 지역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중일 간에는 과거사와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상당기간 불신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양국 간의 패권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부는 미국의 아태 외교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중국 위협론을 지속적으로 강조, 대중 봉쇄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해양권의 강조와 해군력을 증강시키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역사 수정주의적 언행 등에 계속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관계, 한반도 안보에 미칠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에 미칠 영향 순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의 한일관계, 특히 정치·외교적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냉각상태에 있

다. 특히 아베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과거사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고노담화 재해석, 위안부 동원에 대한 강제성 부인,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우경화 노선을 걸어 왔다. 그 결과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로까지 다다르고 있다. 한국이 아베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는 이미 5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한일 양국 정부는 2015년 6월 현재 출범한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양자간 정상회담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⁷⁾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아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해 오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언급은 하고 있지만 양국간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 국민들의 상호인식도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2015년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양국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89.4%(한국), 85%(일본)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상대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응답한 자가 한국은 13.9%로 떨어져 1995년 첫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응답자 비율도 24.5%로 2014년(18%)보다 조금 회복 되었지만 여전히 예전에 비해 크게 낮았다(박석원·강주형 2015). 비슷한 시기 일본 언론 NPO와 동아시아연구소(EAI)가 2015년 4-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의 72.5%와 일본인의 52.4%가 상대국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조금 감소(2014년 54.4%) 했고,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약간 증가

7)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5차례 정상회담은 2013년 6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 10월 발리 APEC 정상회의, 그리고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7월 서울 한-중 정상회담, 11월 베이징 APEC 정상회의이다.

(2014년 70.9%) 한 것으로 나타났다(언론NPO·EAI 2015).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긍정·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한반도에서 발발할 수 있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미일동맹이 군사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역할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일동맹은 태생적으로 한반도에서 발발할 수 있는 전쟁의 상황에 대비하여 체결된 군사동맹이며, 냉전시기에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북한의 전쟁발발에 대한 억지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따라서 과거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미일동맹 강화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북한 급변사태 발발시 한반도 안정화 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미일동맹의 강화가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패권 지향적 외교를 억지함으로써 한반도 안보환경을 안정화시킴으로써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미일동맹 강화가 중국, 북한 및 러시아를 자극하여 이들의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질서보다는 오히려 안보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근 일본이 과거 자국의 침략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2012년 재집권 한 이후 총리가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함으로써 주변국의 우려를 야기했다. 현재 일본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 및 대만과 갈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미일동맹 관계에 의거하여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지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미국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입장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미일동

맹 강화에 따라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세계 안보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일본 헌법 제9조 수정을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아직까지 자국의 침략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 같은 일본의 군사적 위상 강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대일 집단적 자위권 인정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군비 경쟁이 무한대로 치닫게 되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국가들 간 글로벌호크 정찰기, 무인공격기, 항공모함 건조 경쟁, 잠수함 증강,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사상 유례 없는 군비경쟁이 예고된다. 결과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에 한국이 뛰어들면 궁극적으로 속수무책으로 한국이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다음으로 미일동맹 강화가 한미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게 될 것인가. 우선 미국의 일본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인정은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력 증강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지지가 한국에 대한 MD체계 편입 요구, TPP 참여 요구 등과 맞물려 있어 한국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일관계 긴밀화로 최근 미국의 미일동맹을 한미동맹보다 우선하는 일본 편에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경쟁·갈등하는 양태로 변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미일동맹 강화가 한중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미일 군사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포괄적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확대를 도모하는 한국에게 미중 양국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 즉, 미일 대 중국 간 대립 격화는 한국이 설 공간을 더욱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일동맹 강화가 한·미·일 3자협력에 어떤 파급영향을 줄 것인가?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결합하여 한·미·일 3국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아태전략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미일동맹 강화는 북핵 대응 등을 위한 한미일 3각공조차원에서 부인할 수 없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미일 동맹 강화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만들려고 하지만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한미일 공조도 이완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을 요구하고, 국방비 증액,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KAMD)와 미국의 MD의 연계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미일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는 반면, 한일관계는 일본의 아베내각의 우경화 정책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중간의 세력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가능한 한일간 협력을 유도하여 한·미·일 3각안보체제를 강화하여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V. 결론

최근 미일이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신밀월 관계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여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일본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확실하게 궁극적인 목표인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야심 찬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는 결국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미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미일동맹에 대응한 중러 간의 협력 강화와 중일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한일관계의 악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체제에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질서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미일과 중러의 교착지점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주변국간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갈등·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일방을 택하면서 다른 일방과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 안보동맹국인 반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 여하에 따라 동맹 약화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으로서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모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갈등할 수 있는 이슈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전략적 협력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원칙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미일동맹을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은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신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은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인권·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한일관계를 단순히 양자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동북아 평화유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도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급속한 대중접근, 한일관계 악화와 대일외교 경시, 대북한 정책의 원칙적 접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미간 이견 노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2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카네기재단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과거사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양비론적 발언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은근히 두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노효동 2015). 한일관계의 악화가 동북아의 대미, 대중, 대러, 대북한 관계에 주는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 견제와 군사비 경감을 위해 미일 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실정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일관계를 양국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 구도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국익 증진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일관계를 관리하고 한미일 3각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의 공통분모를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리외교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보수 우경화

에 대해서는 역사인식과 방위안보정책을 구분해서 대응하되, 일본에 대한 관여와 견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최근 한국의 대일관계 악화와 대중국 밀착적 태도로 상대적으로 한미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듯한 상황에 대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웬디 셔먼 차관의 발언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의 안보질서 역학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한국의 번영을 위한 기반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서 재확인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적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국의 안보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책 관리와 함께 일본의 침략적 군사행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통해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교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평화통일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독자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대미 편승외교에서도 탈각해야 하며 무엇보다 한일 관계를 포함해 한미동맹과 한중·한러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실용외교가 요구된다.

투 고 일: 2015년 06월 23일

심사완료일: 2015년 07월 22일

게재확정일: 2015년 07월 22일

참고문헌

1. 국문

- 고선규. 2014. “일본 아베정권의 보수우경화 경향과 향후 전망.” 『독도연구』 16: 311-336.
- 교도통신. 2014. “日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정부 견해’ 명기.” (1월 17일).
- 권오현. 2014. “제2차 아베 정권의 교과서 제도 개혁과 역사교과서.” 『역사교육논집』 53: 35-71.
- 김두승·송화섭. 2013. “2013년 미일안보협의회의(2+2회의): 평가와 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http://www.kida.re.kr/nasa/report/detail.asp?idx=1025&cate=0&cy=2013¶ms=cyear=2013^page=>(검색일: 2014.11.30).
- 김두승. 2013. “아베정권의 미일동맹정책과 한국의 안보: 미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16: 3-37.
- 김성철. 2014.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 미일관계.” 『정세와 정책』 218:11-13.
- 김영권. 2014. “일본,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10년간 100억 달러 투입.” <http://voakorea.com/articleprintview/1888210.html>(검색일: 2014.11.18).
- 김용복. 2013.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와 사회』 99:36-62.
- 김용수. 2013.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전격 참배.” 『연합뉴스』 (12월 26일).
- _____. 2014a. “아베 ‘집단지위권 행사’ 가능하도록 헌법해석 변경.” 『연합뉴스』 (5월 15일).
- _____. 2014b. “일본 ‘고노담화’ 작성때 한일간 문안조정 있었다.” 『연합뉴스』 (6월 20일).

- _____. 2014c. “<전쟁 가능한 일본> 아베 ‘脫전후’ 1단계 완료…다음은 개헌.” 『연합뉴스』 (7월 1일).
- 김준섭. 2008. “일본에 있어서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한 연구.” 『일본학보』 76: 327-337.
- _____. 2013.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구 역사는?” 『통일한국』 360: 14-15.
- 김지영. 2013. “일본의 초·중등학교 역사교육 동향.”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PageNum=3&Ac_Group=4&searchSel=&searchKeyword=&Ac_Name=일본통신원&Ac_Code=D0060100&Ac_Num0=16051&Ac_Name2=일본통신원.
- 노효동. 2014. “美, 日 집단자위권 ‘환영’…헤이글 ‘자위대, 광범위한 작전.’” 『연합뉴스』 (7월 2일).
- _____. 2015. “미 ‘과거사는 덮고가자’…한·중·일에 작심하고 촉구.” 『연합뉴스』 (3월 1일).
- 박석원·강주형. 2015. “마주 달리는 한일... 한국민 13.9%만 일본 신뢰해 최악.” 『한국일보』(6월 4일).
- 박영준. 2013. “일본정치 우경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n&catcode=+&code=kor_multimedia&idx=12232&page=3(검색일: 2014.11.5).
- 박형준. 2014. “美日 군사협력, 우주-사이버 공간까지 확대.” 『동아일보』 (10월 9일).
- _____. 2015. “한반도 유사시 日 개입…한국 반발 고려 ‘주권 존중’ 규정.” 『동아일보』 (4월 28일).
- 박진우. 2013. “야스쿠니 문제의 논리적 비판을 위해서.” 도시환 외.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pp.84-89.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박휘락. 2013.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사례 분석과 한국에 대한 교훈.” 『국가전략』 19(4): 83-112.

- 배극인. 2014. “日 정조회장 ‘고노담화 수정을.’” 『동아일보』 (9월 5일).
- 배정호 외. 2013. 『오바마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 서승원. 2014. “시진핑과 아베 신조의 중일관계 : 군사안보적 고려, 지정학적 환원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게임.” 『일본연구논총』 39: 153-87.
- 서의동. 2012. “초강경 자민당 총선공약.” 『경향신문』 (11월22일).
- 신민재. 2014. “中사회과학원 전문가 ‘중일관계 악화는 복합적 원인.’” 『연합뉴스』 (7월 12일).
- 아산정책연구원. 2014. “국가수장 호감도.”
<http://asaninst.org/contents/14%EB%85%84-7%EC%9B%94%EA%B5%AD%EA%B0%80%EC%88%98%EC%9E%A5-%ED%98%B8%EA%B0%90%EB%8F%84/>(검색일: 2014.11.20).
- 언론NPO-EAI. 2015. 『제3회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 결과 보고서』(2015년 5월).
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atcode=+&code=kor_report&idx=13766&page=1(검색일: 2015.6.20).
- 유웅조. 2015. “신 마·일방위협력지침의 주요내용 및 쟁점과 한국의 대응 과제,” 『이슈와 논점』(국회입법조사처) 1001.
- 이동구. 2013. “미일동맹 강한 유대감, 완전 부활.” 『교도통신』 (2월 23일).
- 이면우. 2014. 『일본 정계의 ‘우익’ 성향 강화와 동북아 : 보수세력 확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외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 이세원. 2014. “日보수·우익, 고노담화 검증으로 부족…수정 압박.” 『연합뉴스』 (6월 22일).
- 이우탁·이충원. 2013. “新밀월관계 신호탄 마·일정상회담.” 『연합뉴스』 (2월 23일).
- 정철호. 2014. “미·일동맹과 日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딜레마.”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2014-09.

조양현. 2014.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이후 한일 관계.” 『주요국제문제 분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06.

조준형. 2014. “아베 ‘헌행 헌법은 점령군 영향…스스로 만들어야.’” 『연합뉴스』(10월 18일).

최재천 의원실, 2014. “아베 정권 이후, 日 의원 및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급증.” 『보도자료』(8월15일).

<http://yourrights.co.kr>(검색일: 2014.9.5).

콘도 다이ске(近藤大介). 201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아베 신조의 야망.” 『월간중앙』(8월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2536>(검색일:2014.9.20).

호사카 유지. 2014.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독도문제.” KIMS Morning Forum (4월 3일)발표 자료.

홍제성. 2014. “중국, 미일정상 ‘센카쿠 안보적용 대상’ 확인에 반발.” 『연합뉴스』(4월 24일).

홍제성·이준삼. 2015. “中 ‘위안부 증거 산처럼 쌓여있어’…아베 발언 비난.” 『연합뉴스』(4월 28일).

HeraldK. 2015. “시진핑-푸틴 수천억 달러 규모 경제협력 합의.” 『헤럴드경제』(5월 8일).

<https://heraldk.com/2015/05/08/%EC%8B%9C%EC%A7%84%ED%95%91-%ED%91%B8%ED%8B%B4-%EC%88%98%EC%B2%9C%EC%96%B5%EB%8B%AC%EB%9F%AC-%EA%B7%9C%EB%AA%A8-%EA%B2%BD%EC%A0%9C%ED%98%91%EB%A0%A5-%ED%95%A9%EC%9D%98/>(검색일: 2015.6.10.).

2. 영문

Bowie, Nile. 2014. "Is Japan's Shinzo Abe Pivoting to the Past?."

<http://www.rt.com/op-edge/japan-abe-nationalist-counter-china-535/>
(검색일: 2014.10.5).

Chanlett-Avery, Emma, et al. 2014.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https://www.fas.org/sgp/crs/row/RL33436.pdf>(검색일: 2014.11.30).

Klingner, Bruce. 2013. "U.S.-Japan Security Agreement Enhances Allied Goals."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3/10/us-japan-security-agreement-enhances-allied-goals>(검색일: 2014.11.19).

_____. 2014. "Abe's Yasukuni Visit Imperils Allied Security Interests."

<http://www.heritage.org/research/commentary/2014/10/abe-yasukuni-visit-imperils-allied-security-interests>(검색일: 2014.11.19).

Rinehart, Ian E.; Hildreth, Steven A. and Lawrence, Susan V. 2013.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https://www.fas.org/sgp/crs/nuke/R43116.pdf>(검색일: 2014.11.30).

Xu, Beina. 2014.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http://www.cfr.org/japan/us-japan-security-alliance/p31437>(검색일: 2014.11.20).

Abstract

Abe Administration's Right-wing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and Their Impact on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Lee, In Ho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or Abe Administration's Right-wing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to impact on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ituation.

Launched in December 2012, Abe's 2nd term Government domestically has been promoting Right-wing policies, such as visiting Yasukuni shrine, reviewing Kono Statement. And also Abe government is trying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mended 'the US-Japan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 and to pursue a missile defense system for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Abe Administration's Right-wing trend and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eventually provoke conflicts between the US-China in the Northeast Asia,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deteriorate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 Korea-Japan relations, and exert negative impact on the ROK-US Alliance and the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is necessary to make wise judgment politically after carefully analyzing the change of the mutual relationship with Korea's neighbors.

First, Korea should avoid switching to a hostil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as selecting one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for establishing a new future-oriented Korea-Japan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emotional response, and then to promote pragmatic diplomacy such as actively pursuing common denominators of national interests. And it also needs to maintain an organic relationship of Korea-US-Japan through strengthening Korea-US alliance while controlling Japan.

Keywords: Abe Administration, Right-wing Trend, The U.S.-Japan Alliance, Collective Self-defense, Yasukuni Shrine, Guidelines for U.S.A-Japan Defense Cooperation, Kono Statement